

봉화 K-베트남 벨리, 관광지 조성 등 3500억 특화사업 본궤도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주택공급 등 관련 제도적 제약 완화
노용석 차관 “성과중심 운영·관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약 3500억원을 투입해 경북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K-베트남 벨리’에 힘을 실어줬다.

중기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벨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봉화 K-베트남 벨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51억원, 도비 277억원, 군비 1701억원, 민자 447억원 등 총 34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이미 1127억원이 쓰였다.

이를 통해 ▲리왕조 역사교육, 한·베 문화교류 거점, 베트남 이주민 정착지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K-베트남 벨리 조성 ▲한·베 문화교류 복합공간, 베트남 테마 관광명소 조성 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봉화 3대 청정약수 체험 및 자연경관 연계 휴양공간 운영 등 다덕약수관광지 조성 등 8개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출입국관리 특혜(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외(지방재정법), 주택공급 기준 완화(주택법) 등 10개 규제특례도 적용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 토지이용, 주택공급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도 완화한다.

봉화군에 따르면 베트남 리 왕조 6대 황제의 아들이자 화산이씨(花山 李氏)성을 가진 이용상의 후손들이 경북 봉화군에 정착하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봉화군에는 충효당을 비롯한 유허비, 재실 등 베트남 최초 독립왕조인 리 왕조(1009~1225년) 유적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1226년 고려에 정착했던 이용상의 화산 이씨 후손들은 현재 약 12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벨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먼저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일부 지구의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 등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총 사업비를 9453억원에서 1조3706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규제특례(4건)는 해제했다.

이와 함께 특화사업 완료나 운영여건 변화 등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가 신청한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경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의 지정해제도 의결했다. 각 지방정부는 특구 해제 이후에도 필요한 사업을 자체사업이나 관련 정책과 연계해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6월 경상수지 흑자 497.3억달러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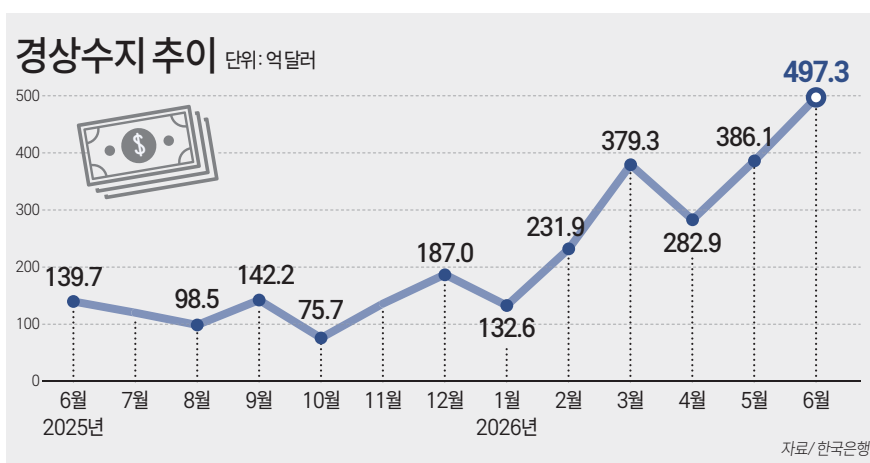
전년 대비 반도체 수출 196.9% 급증
상반기 누적 흑자 1910억1000만弗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96.9% 급증하면서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 국내 주식을 역대 최대인 316억 1000만달러 순매도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5월의 386억 1000만달러보다 111억 2000만달러 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6월보다는 357억 6000만달러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8억 7000만달러보다 약 4배로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상품수지가 이끌었다. 상품수지 흑자는 478억 9000만달러로 전월의 378억 6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 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4.5% 증가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통관 기준 수출도 1021억 7000만달러로 70.7% 늘었다. 국제수지상 수출입은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통관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난다.

수출 증가세는 정보기술(IT)과 비IT 품목에서 모두 나타났다. 통관 기준 IT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60.4% 증가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가운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282.7%, 반도체가 196.9%,

무선통신기기가 60.6% 늘었다. 비IT 수출도 석유제품과 화공품, 철강제품,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상품수입은 644억 8000만달러로 38.6% 증가했다. 원자재가 30.5%, 자본재가 35.3%, 소비재가 16.4%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도입 단가 상승으로 50.3% 증가했지만 도입 물량은 12.6%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 9000만달러 적자로 전월보다 적자 폭이 2억달러 커졌다. 여행수지는 방한 외국인이 늘고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출국자가 줄면서 4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입은 역대 최대였고 여행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두 번째였다. 반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전월의 정산 집중 효과가 사라지며 4억 4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기타 사업서비스도 15억 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25억 6000만달러로 확대된 데 힘입어 32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467억 1000만달러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263억 2000만달러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 1000만달러 줄어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채성증권 투자는 세계국제지수(WGBI) 관련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 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52억 9000만달러에 그쳤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35억 6000만달러 증가했다. 해외주식 투자는 75억 3000만달러 늘었지만 부채성증권 투자는 매파적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며 39억 8000만달러 감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공정위, 76조 국고채 담합 적발… 금융사 15곳 제재 수준

10개 증권사·5개 은행 대상

국가재정 자금 조달과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입찰에서 약 76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돼 대형 증권사와 은행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위 사무처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년 2월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담합 의혹을 받는 피심인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이들 15개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물량 등을 사전 모의하는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담합행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 2000억 원에 이른다.

국고채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시중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를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해 입찰 독점 권한과 함께 유통시장 호가 제시 등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PD사는 18개사로 이 가운데 3개 사는

담합 증거가 없어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정보교환담합을 위반한 ‘배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인 15조원에 달할 수 있다. 심사관은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게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들이 단순한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은 피심인들 간 관행적 소통이라고 볼 수 없는 투찰, 금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담합과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는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이 추가 돼 있는 사건이라서 그냥 단순한 정보 교환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면서도 “재정경제부도 입찰 담합 방지 필요성에 대해 공정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제시장에서 PD제도의 중요성, 공정위 제재의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국·인도계 팹리스 등 삼성 5나노 공정 검토

TSMC 공급 부족 등 기회 작용

TSMC의 첨단공정 공급 부족도 삼성 전자에는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TSMC의 3·4·5나노 생산라인이 빠르게 채워지면서 중국과 인도계 팹리스를 비롯해 공급 일정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삼성전자 5나노 공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TSMC는 AI 반도체 주문에 대응해 2나노와 3나노 생산능력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3나노 월 생산능력은 올해 상반기 15만장에서 4분기 18만장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나노 생산능력도 상반기 월 5만~6만장에서 연말 10만장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 주요 고객사의 주문 증가에 맞춰 일부 5나노 장비를 3나노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증설 시점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2029~2030년까지 수주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올해 자본지출 전망도 기존 500억달러대에서 600억~64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삼성전자가 고객사에게 5나노 공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비용 경쟁력과 공정 안정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 수준의 성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고객사라면 원가와 공급 일정 등을 감안해 5나노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